경상남도 GYEONGNAM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보 도 자 료

2019년 4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팀 : 산업혁신과 산업혁신담당	담 당 : 김일수 사무관 담당자 : 김재현 주무관	연락처 : 055-211-3052 055-211-3054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경남경제 위기극복 총력

- 15일(월) 창원 재료연구소, '제9차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개최
- 조선산업 위기극복 위해 '고용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 1,714억 원 투입'
-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까지 20곳 선정 목표
- 스마트산업 고도화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8천명 양성
- 방문규 위원장 "조선위기, 도시재생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야"
- 문승욱 경제부지사 "조선산업 위기극복에 행정력 집중"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15일(월) 창원의 재료연구소에서 '제9차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 스마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계획 ▲경남 조선업 위기극복 방안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경상남도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쟁점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제안에 집중했다.

<경상남도 스마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회의에서 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새로운 스마트 제조환경 변화에 대응할 '스마트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 경상남도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과 병행해 스마트공장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제조인력 8천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재직자·전문가 교육 분야와 신규인력 양성 분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세부 분야별 현장 맞춤 특화교육을 시행한다. 경남테크

노파크, 삼성전자, 경남창원 산학융합원, 중소기업진행공단,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영산대 등 도내 모든 교육기관을 결집하고, 그 기능을 분산해 약 30개 과정 이상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김경수 도지사의 제조혁신 전략에 따라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천개 확산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스마트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현장 맞춤형 스마트공장 모델 발굴, 업종별·단계별 시범모델 구축 및 제조기업 스마트산업 실태조사 등 제조혁신 질적 고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경남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8일(월) 방문규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지원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한 내용도 보고했다. 8일 현장 방문은 지역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와 경남의 독특한 전통문화 자원인 하동 청학동 서당 등의 현장방문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청학동 서당은 실제로 농협과 부산경남은행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체류형 관광테마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 조선업 위기극복 방안>

우성훈 경상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 활력을 회복하고자 '경남 조선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3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최근에는 지역의 조선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의 일감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조선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423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지원과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사업 등 11개 사업, 1,291억 원 규모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친환경 및 자율주행 선박의 수요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 K-야드,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시운전센터,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지원센터 구축 등 조선해양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도 발굴 중에 있다.

한편, 지난 4월 초에는 창원시 진해구를 비롯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2020년 4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된 바 있고, 이들 4개 지역 외에 창원 성산구와 김해시를 추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19.5.29.~'21.5.28.)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허상윤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장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 도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자립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경상남도는 최근 2년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곳이 선정돼 전국 지자체 중 2위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3년간 20곳 선정을 목표로 경남형 도시재생 차별화 전략으로써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내용이다.

*** 공공건축가 제도** :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공공건축의 한계를 넘어 민간전문가 참여로 완성도 높은 발전적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 도심 정비사업 등의 계획·설계 단계에 건축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임명해 도시경관의 조화와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1단계로 지난해 10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출범해 지역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는 등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2단계로는 경상남도 자체 특화사업(도시재생 희망 틔움 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 다음, 3단계로 본 사업인 정부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각 단계별 선순환 모델이 정착되면,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기반, 그리고 지역공동체 모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업 위기 극복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체, 근로자 및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화해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조선산업의 완연한 수주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형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지역기업과 지역사회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건의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및 일자리 상생모델 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개최된 재료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기계연구소로 발족(1981년)해 현재는 한국기계연구원(본원:대전) 부설기관으로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인 스마트공장 센서기술, 3D프린팅 소재기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기술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주력산업과 제조혁신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상남도는 지역R&D체계의 혁신을 위해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혁신과 김일수 사무관(055-211-3052) 또는 김재현 주무관(055-211-30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